

근로빈곤층에 대한 탐색적 연구:

개념정의와 실태파악*

홍 경 준

(성균관대학교)

[요 약]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상이하게 나타날 뿐 아니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은 '빈곤한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나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이 연구의 개념정의의 방식을 따를 때,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이 여성보다 약간 더 많고,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은 선행 연구들의 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직종별로 보면 판매서비스직과 농업업직의 비중이,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과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았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일용직의 비중이 상용직의 비중보다 높았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근로빈곤층, 근로빈곤층의 개념,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 정책

* 이 연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고, 명륜복지연구회 세미나와 제 6회 한국노동패널학술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승가대학교의 정승국 교수, 한국노동총연맹연구원의 임운택 박사와 다른 참석자들의 토론에 감사드린다.

1. 서론

전통적으로 빈곤의 문제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취약한 집단, 즉 노인이나 장애인, 혹은 편부모 집단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근로능력을 가지거나 고용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집단이 상당한 규모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한 여러 연구들(박찬용·김진욱·김태환, 1999; 구인회, 2001; 금재호, 2003)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 흔히 근로빈곤층(working poor)으로 지칭되는 이러한 빈곤집단은 대부분 저숙련 근로자들로 짧은 노동시간과 낮은 임금, 실업과 취업의 반복 경험 등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빈곤에 빠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vitan and Shapiro, 1987; Schiller, 1998; 이태진, 2003). 따라서 일반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노동시장에서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 취업층이 많아질수록 그에 비례하여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심각해진다 고 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불안정 취업의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등장했고, 이러한 맥락에서 근로빈곤층의 문제 또한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방안 등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둔 정책적 논의들이 빈곤정책의 전 영역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데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시간이 갈수록 이들의 빈곤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 여러 연구들(황덕순, 2001; 금재호·김승택, 2001; 이병희·정재호, 2001; 홍정준, 2004)이 가구주나 가구원의 취업 여부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해당 가구의 빈곤지위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일반적인 빈곤과 빈곤층 전체의 문제를 다루면서 근로빈곤, 혹은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부가적으로 다룰 뿐이다.

근로빈곤층에 대한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념정의와 실태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규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과 관련해서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가령, 외환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이 상당한 규모로 출현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 이후 지금까지 이들의 규모가 늘었는지, 혹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은 어떠하며,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주로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책은 상당부분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둔 정책들의 시급성은 근로빈곤층의 빈곤문제가 노인이나 아동의 빈곤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가와 관련해서 판단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성별이나 연령, 학력과 같은 인구학적 특성이나 취업특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근로빈곤층에 초점을 둔 빈곤 정책의 방향은 상당한 편차를 가질 수 있다. 가령,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아동을 보육하는 여성이라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 정책은 탁아 및 보육 서비스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임금 근로자가 아니라 자영자라면 근로소득보전세제와 같은 정책에 대한 기대는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차원의 관심에도 불구하고 개념 정의와 실태와 같은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논의나 규명이 매우 미흡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에 대한 확인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

1) 선행연구의 검토

근로빈곤층은 편의와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혹은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근로자’(Gorham and Harrison, 1990),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Levitan, Gallo and Shapiro, 1993; 금재호, 2003) 등으로 지칭된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도 근로 빈곤층에 초점을 둔 연구들(노대명 외, 2003; 금재호, 2003; 이태진 외, 2004)이 조금씩 산출되고 있지만 근로빈곤층의 개념은 연구자들에 따라 달라 사용되고 있다. 노대명 외(2003)와 이태진 외(2004)는 구체적인 조작적 정의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가지지만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러한 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근로빈곤층의 다수는 여성, 50세 이상의 장노년층, 중졸 이하의 저학력자이며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도 상당히 높다. 또한 근로빈곤가구의 가구주나 가구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미취업자의 비중이 높은 반면, 취업자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재호(2003)는 Levita, Gallo and Shapiro(1993)와 마찬가지로 취업자가 있으면서 빈곤한 가구를 일하는 빈곤가구(working poor)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체 빈곤 가구의 절반 이상은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가구이며, 취업자가 있는 가구들 중 빈곤한 가구는 대략 7가구 중의 하나 꼴이다. 하지만 취업자가 있는 일하는 빈곤 가구는 취업자가 없는 빈곤가구에 비해 빈곤에서 이탈할 확률은 더 높은 반면 빈곤에 진입할 확률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하는 빈곤가구는 여성 가구주가구, 노인 가구주가구 및 저학력 가구주 가구에 집중되어 있어 근로빈곤층의 개인적 특성은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선행연구들에서 근로빈곤층을 개념 정의하는 방식이 특정한 정책적 지향에 편향되거나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선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것은 근로연계복지(workfare)라는 특정한 정책적 지향에 편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방식의 개념 정의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아동 양육이나 노인 부양 등의 사유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노동시장에 참여해야 하는 근로인구로 보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동을 양육하거나 노인을 부양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또한 빈곤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는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전제되지 않는 한 근로능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 전체를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즉, 빈곤정책의 우선순위가 근로를 통해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을 목표로 하는 근로연계복지에 두어진 경우가 아니라면, 이들까지도 근로빈곤층으로 분류하는 것은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둘째, 근로빈곤층을 '정규직 임금근로자'이면서 소득이 너무 낮아 가족을 빈곤으로부터 탈피시킬 수 없는 모든 근로자라고 정의했을 경우에는 비정규직 임금근로, 영세자영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다수의 근로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구조의 악화에 따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개념정의는 앞의 개념 정의와 달리 근로빈곤층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했을 때에는 앞의 두 가지 개념정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근로빈곤층이 가진 중요한 특성의 하나는 이들이 매우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상당수의 근로빈곤층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면서 경황과 비경황,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즉, 지난 달에는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비경황자가 이번 달에는 취업자일 수 있고, 다음 달에는 다시 실업자로 되돌아가서 구직활동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현재 취업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곤한 근로자'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하면, 현재 실업자나 경제활동인구에서 탈락한 실망실업자는 근로빈곤층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근로빈곤층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한다. 미국 노동부에서는 Klein과 Rones(1989)의 논의를 수용하여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에서 적어도 6개월(1년 중 27주) 동안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 노동부의 이러한 정의를 참고하여 근로빈곤층을 '빈곤 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빈곤층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정규직 임금노동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물론, 그 특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개념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또한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라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비교해 본다.

2) 분석의 방법

이 연구의 개념정의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빈곤층의 종사상 지위나 고용 지위에 대한 종단적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횡단적 자료에서는 종사상 지위나 고용 지위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정보나 과거의 특정 시점에 대한 회고적 정보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KLIPS)는 응답자의 종사상 지위나 고용 지위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는 고용력 자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른 근로빈곤층을 구체화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라 근로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된다. 여기에서 근로빈곤층 II가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의 방식이며, 근로빈곤층 I과 근로빈곤층 III은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의 방식이다.

① 근로빈곤층 I(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 빈곤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지난 1주간 주요활동에 대해 ‘연로’나 ‘퇴직’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심신장애’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

② 근로빈곤층 II(6개월 간 경황 빈곤층) ; 빈곤가구의 근로능력을 가진 가구원 중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

③ 근로빈곤층 III(취업 빈곤층) ; 빈곤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

한편, 근로빈곤층의 빈곤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빈곤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빈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경제적 자원의 결핍으로 정의될 수 있다(Ruggles, 1990; Citro and Michael, 1995). 따라서 빈곤에 대한 개념정의와 그에 따른 측정은 어떤 개인(가구)이 가진 경제적 자원과 욕구의 비교를 필요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기본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은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적절한 지표가 무엇인지와 욕구의 수준(빈곤선)을 측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흔히 경제적 자원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소득이나 소비가 활용되며, 빈곤선을 측정하는 기준으로는 절대적 기준이나 상대적 기준이 활용된다. 절대적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의 수준을 기본적 욕구로 파악하고, 그러한 기본적 욕구의 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이나 소비를 빈곤선으로 설정한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선은 한 시점에서 결정된 이후에는 물가변화만이 고려된다. 반면에 상대적 기준은 기본적인 생활의 유지와 관련된 욕구의 수준이 사회의 일반적 욕구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파악한다. 따라서 필요한 소득이나 소비의 수준은 상대적인 것으로 다른 사회성원들의 일반적 욕구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다.

빈곤을 측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빈곤의 규모는 물론 그 변화추이는 달라질

수 있다. 사회전체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된다고 가정할 때,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빈곤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빈곤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할 수도 있다. 이는 상대적 빈곤이 소득분배의 개선을 통해서만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의 빈곤을 모두 활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도 두 가지 개념의 빈곤을 모두 활용하는데, 각각에 대한 측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절대적 빈곤선은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중 2차년도 조사자료를 통해 구하였다. 즉, 2차년도 조사자료에 수록된 가구의 연간 총소득(비경상소득 포함)을 균등화지수로 조정¹⁾한 균등화소득(equivalence income)의 분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을 구하고, 이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다.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정의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중위소득의 개념을 활용하는 이유는 이 연구에서 활용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가 가진 문제점 때문이다. 초기에 수집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의 소득정보가 여러 면에서 과소 보고되어 있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연구들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소득의 과소보고 문제를 고려하면서 절대적 빈곤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빈곤선이나 소득의 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중위소득의 개념이 이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다(홍경준, 2004). 한편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사용한 것은 정부가 공표하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가 2000년 소비실태조사 자료에서 추정된 중위소득의 40% 정도에 있기 때문이다. 즉,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액이 한국의 공식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 수준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편 상대적 빈곤선은 해당년도의 소득분포를 활용하여 중위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한국노동패널조사자료 중 2차년도의 경우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이 동일하지만, 그 이후인 4차년도와 6차년도의 경우에는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은 다르다. <표 1>은 분석대상년도의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을 제시한 것이다.

<표 1> 절대적 빈곤선과 상대적 빈곤선

(단위 : 만원)

	2차년도(1999)	4차년도(2001)	6차년도(2003)
절대적 빈곤선	350.02	350.02	350.02
상대적 빈곤선	350.02	400.00	478.95

1) 각각의 조사자료에서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소득으로 측정되었음. 따라서 2차년도(1999) 소득액은 1998년의 소득액을, 4차년도(2001)는 2000년의 소득액을, 6차년도(2003)는 2002년의 소득액을 말함.

2) 각각의 소득은 소비자 물가지수로 조정된 소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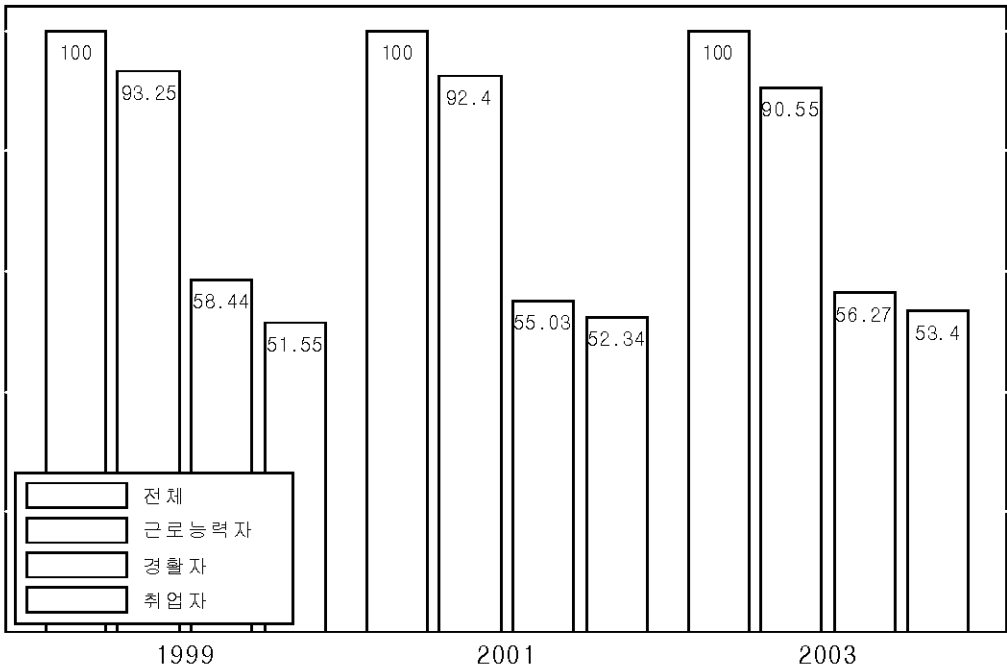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1) 조정된 소득 = 가처분소득/가구규모^E. 여기에서 균등화 탄력성 E는 0부터 1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값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제가 적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식에 따라 균등화 탄력성을 0.5로 두어 가구 규모를 조정한다.

3. 분석의 결과

1)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그 변화추이를 살펴보기에 앞서 근로빈곤층을 포함한 전체 근로계층(working population)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노동패널조사자료를 통해 살펴본 것이 <그림 1>이다. 여기에서는 각각의 조사년도에 포함된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100으로 할 때, 앞에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에 일치하는 각각의 전체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았다.



- 1) 근로능력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지난 1주간 주요활동에 대해 '연로'나 '퇴직'으로 응답한 사람들 중 65세 이상인 사람과 '심신장애'로 응답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의미함.
 - 2) 경활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을 의미함.
 - 3)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그림 1> 근로계층의 비중변화: 1999~2003

2차년도 조사자료(1999년)의 경우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에서 근로능력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이며,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적어도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8%이다. 한편,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로부터 2년 후인 4차년도 조사자료(2001년)에서는 근로능력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92%, 6개월 간 경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5%,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그로부터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2003년)에서는 근로능력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91%, 6개월 간 경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56%,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 중 근로능력이자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지만 6개월 간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차년도 조사 자료에서 약간 줄어들었다가 6차년도 조사 자료에서는 다시 증가하였고,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층을 어떤 식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계층의 규모는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며, 그 변화 추이 또한 상이하다는 것이다.

이제 이러한 근로계층의 비중변화를 염두에 두면서, 세 가지 방법으로 정의된 근로빈곤층의 규모를 살펴보자. 먼저 <표 2>는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은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근로계층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개인들의 규모와 그러한 개인들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의 규모를 노동패널조사자료의 2차년도, 4차년도 및 6차년도 자료를 통해 추정해 보았다.

<표 2> 근로빈곤층의 규모(근로빈곤층 I)

(단위 : %)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절대적 빈곤	빈곤율	12.4	13.3	10.7	11.8	7.1	8.8
	빈곤층에서의 비중	83.6	77.0	78.3	69.9	65.9	59.0
상대적 빈곤	빈곤율	12.4	13.3	12.0	13.5	10.7	12.9
	빈곤층에서의 비중	83.6	77.0	78.3	70.8	69.9	63.9
사태수		11,960	4,469	10,929	4,195	11,462	4,553

- 1) 근로빈곤층 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의미함.
 -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계층 중에서 빈곤한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10.7%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7.1%로 대폭 감소하였다. 근로빈곤층의 감소는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전체 빈곤층 중에서 근로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3.6%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78.3%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65.9%로 감소하였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비중 또한 2차년도부터 6차년도 사이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결과는 어떠한가?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2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율은 12.4% 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율은 12.0%이며 6차년도 조사자료의 빈곤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구단위로 측정한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비중의 감소 추세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 중에는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여건상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3>은 근로능력을 가진 근로빈곤 계층 중에서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들만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를 살펴본 것이다. 이러한 정의는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제외함과 동시에, 조사시점에서는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는 취업하고 있었던 취업자나 구직활동을 수행하던 실업자를 모두 근로빈곤층에 포함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이 대단히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른 개념정의 방식보다는 더 적절한 것이다.

<표 3> 근로빈곤층의 규모(근로빈곤층 III)

(단위 : %)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절대적 빈곤	빈곤율	11.4	11.6	8.9	9.6	5.8	6.8
	빈곤층에서의 비중	48.5	63.9	38.7	53.1	33.2	42.9
상대적 빈곤	빈곤율	11.4	11.6	10.2	11.0	8.9	10.7
	빈곤층에서의 비중	48.5	63.9	39.5	54.2	36.3	49.6
사례수		11,960	4,469	10,929	4,195	11,462	4,553

- 1) 근로빈곤층 II는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을 의미함.
 -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근로빈곤층을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으로 정의한 <표 3>을 보면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6개월 간 경제활동인구 중 빈곤한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4%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수치는 앞의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계층의 빈곤율보다 약 1% 포인트 작은 것이다.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의 빈곤율은 약 8.9%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5.8%로 대폭 감소하였다. 4년 사이에 절반가량 빈곤율이 감소한 것이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48.5%였는데 빠르게 감소하여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8.7%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3.2%로 줄어들었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빈곤율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살펴본 근로빈곤층의 규모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약 11.4%인데, 4차년도에서는 이들의 비중이 약 10.2%로 줄어들었

고, 6차년도에서는 다시 8.9%로 감소하였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경향은 가구단위로 측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개념 정의한 <표 4>에서도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절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하면,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취업 근로계층 중에서 빈곤한 취업 근로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8.4% 정도로 감소하였으며, 다시 2년 후인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5.3%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들이 전체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2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전체 빈곤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1%이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35.0%로, 다시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는 29.0%로 감소하였다. 가구단위로 측정된 근로빈곤층의 규모 또한 이 시기동안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한 분석의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상대적 빈곤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취업하고 있는 근로빈곤층이 전체 취업 근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차년도 조사자료의 10.2%에서 4차년도 조사자료의 9.7%로, 6차년도 조사자료의 8.4%로 일관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빈곤층 중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일관되게 감소하고 있으며,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에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표 4> 근로빈곤층의 규모(근로빈곤층 III)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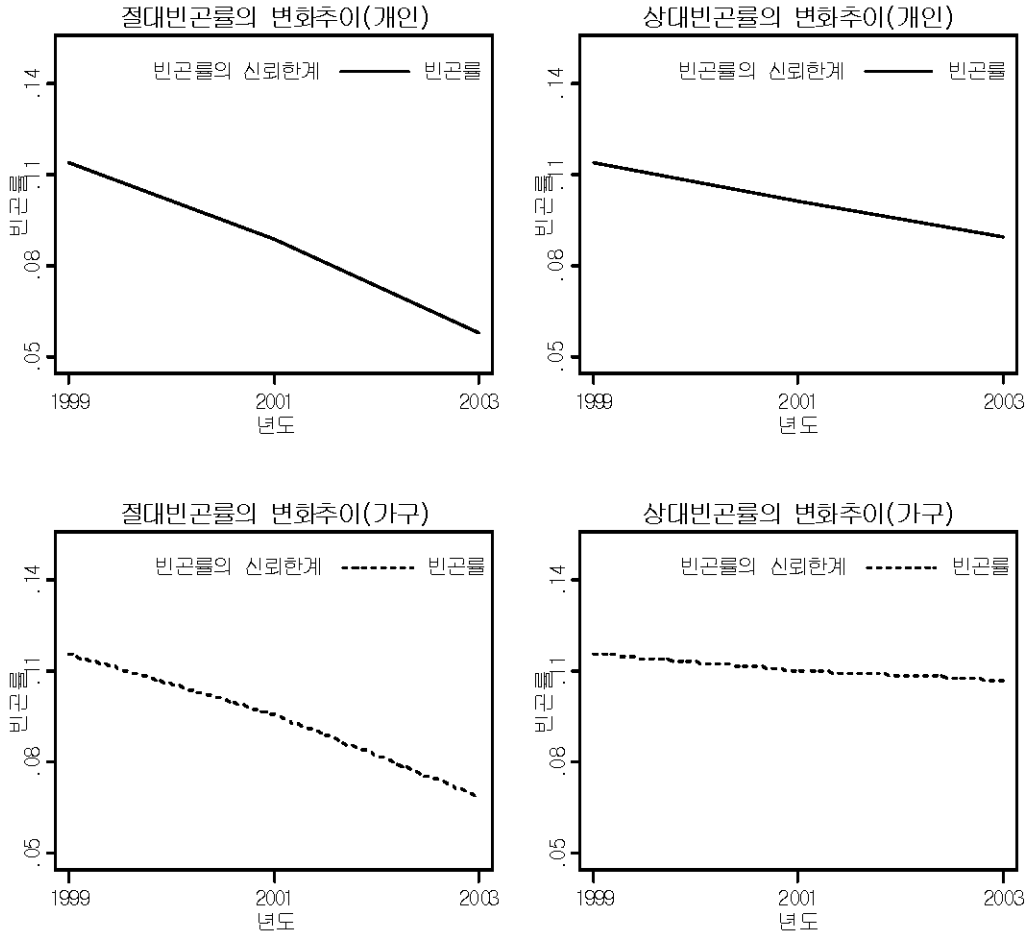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개인	가구	개인	가구	개인	가구
절대적 빈곤	빈곤율	10.2	11.0	8.4	9.4	5.3	6.4
	빈곤층에서의 비중	38.1	58.3	35.0	51.3	29.0	39.6
상대적 빈곤	빈곤율	10.2	11.0	9.7	10.8	8.4	10.3
	빈곤층에서의 비중	38.1	58.3	35.8	52.3	32.2	46.8
사례수		11,960	4,469	10,929	4,195	11,462	4,553

- 1) 근로빈곤층 III은 취업 빈곤층을 의미함.
 - 2) 근로빈곤가구는 근로빈곤층이 가구원으로 포함된 가구를 의미함.
 - 3) 개인은 개인가중치로, 가구는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그렇다면 이상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우선 패널조사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신규가구를 포함하긴 하지만 패널조사자료에서는 각 조사시점마다 이탈하는 표본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6차년도 조사자료까지 약 23%의 표본이 이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탈한 표본의 상당수는 이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빈곤계층에서 발생될 수 있고,²⁾ 그에 따라 후행 년도의 표본을 통한 근로빈곤층 규모 추정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추정에 따르는 추

2) 이병희·정재호(2001)의 연구에서 12개의 분기를 연결한 도시가계조사패널자료의 상대적 빈곤율이 실제 도시가계조사의 그것보다 낮다는 보고는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정오차의 문제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이루어진 근로빈곤층의 규모 추정은 점추정한 결과로 추정오차를 가지기 때문이다.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그림 2> 근로빈곤층 규모의 변화추이: 구간추정의 결과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그림 2>는 근로빈곤층을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의 변화추이를 95% 신뢰수준에서 구간 추정해 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근로빈곤층 규모의 변화추이는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를 제외한다면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여준다. 즉,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동안 경제활동에 종사했던 근로빈곤개인이나 이들이 가구원으로 포함되어 있는 근로빈곤가구의 규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추정에 따르는 추정오차의 문제를 고려해보아도 한국의 근로빈곤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파반수 이하로 줄어들었음을 감안한다면, 패널조사에서의 과소 추정의 문제를 고려한다고 해도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5> 근로빈곤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근로빈곤층 II)

(단위 : %)

		2차년도	4차년도	6차년도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별 빈곤율	상용직	4.9	6.7	7.0
	임시직	24.1	18.5	22.2
근로빈곤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	일용직	30.7	25.7	21.0
	자영자	12.8	12.9	12.1
	가족종사자	35.2	21.4	18.9
	비취업자	25.0	26.1	32.3
근로빈곤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	상용직	21.0	33.3	36.7
	임시직	14.3	8.9	9.4
	일용직	19.9	17.6	13.8
	자영자	34.6	35.3	34.0
	가족종사자	1.3	1.5	0.5
	비취업자	8.8	3.5	5.5

1) 근로빈곤층 II는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경할 빈곤층을 의미함.

2) 가구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2, 4, 6차 자료.

한편 <표 5>는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근로 가구의 빈곤율과 근로빈곤 가구 주소득자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2차년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과 가족종사자와 같은 취업자인 가구의 빈곤율이 비취업자 가구의 빈곤율보다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4차년도 조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과 가족종사자와 같은 취업자인 가구의 빈곤율보다는 비취업자 가구의 빈곤율이 더 높고 이는 6차년도 조사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2차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35.2%로 가장 높은 빈곤율을 보이는 가족 종사자 가구의 경우 4차년도의 빈곤율은 21.4%로 낮아졌으며, 다시 6차년도에는 18.9%로 더 낮아졌다. 가구의 주소득자가 일용직인 가구의 빈곤율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아진다. 일용직 가구의 2차년도 빈곤율은 약 30.7%이지만 4차년도에는 25.7%로 낮아졌으며, 다시 6차년도에는 21%로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비취업자 집단의 경우 가구 단위로 측정된 2차년도의 빈곤율은 약 25%이지만 4차년도에는 26.1%로 높아졌으며, 다시 6차년도에는 32.3%에 달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같은 취업자라고 할지라도 주소득자가 일용직과 가족종사자인 가구의 빈곤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의 빈곤율은 이와는 달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가구 단위로 측정된 빈곤율을

보면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의 빈곤율은 2차년도에는 4.9%이지만 4차년도에는 6.7%로 2% 포인트 가량 높아졌고, 다시 6차년도에는 7.0%로 높아졌다.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의 빈곤율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에서 이들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전체 근로빈곤 가구 중에서 주소득자가 상용직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차년도의 경우 약 21.0%이지만 4차년도에는 33.3%로 높아졌으며, 다시 6차년도에는 36.7%로 더욱 높아져서 주소득자가 자영자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을 초과하게 된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근로빈곤층을 정의하고 그 규모를 살펴본 결과, 이들의 규모는 빈곤측정의 기준과 단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가지지만 감소, 혹은 정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 규모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상용직 가구의 빈곤율은 오히려 늘어났고 그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2)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앞서 언급했지만,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 정의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특성은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서 근로빈곤층 개개인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표 6>은 근로빈곤층의 성별 구성을 살펴본 것이다.

<표 6> 근로빈곤층의 성별 구성

(단위 : %)

	전체 (N=11,462)	빈곤층 (N=1,651)	근로빈곤층I (N=1,154)	근로빈곤층II (N=601)	근로빈곤층III (N=537)
남성	48.43	43.18	41.58	50.92	48.83
여성	51.57	56.82	58.42	49.08	51.17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 3) 근로빈곤층 II는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을 말함.
- 4) 근로빈곤층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성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남성이 약 48%이며 여성이 약 52%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약간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 중 빈곤한 사람들만을 골라서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약 43%, 여성의 비중은 약 57%로 여성의 비중이 더 커짐을 알 수 있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골라서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의 비중은 약 58%로 더 커진다.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여성이라는 인식은 이러한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을 현재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조사시점에서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성별 구성을 살펴보면, 남성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근로빈곤층을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으로 개념 정의하면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취업빈곤층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경우에는 다시 남성의 비중이 약간 줄어들어서 49%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성별 구성은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성별 구성과 거의 유사한 것이다. 결국 근로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이들의 성별 구성은 상당히 달리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을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은 연령이 높다는 특성을 가지는데, 이는 <표 7>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된다. 전체 빈곤층의 연령별 구성을 보면,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5%로 절반 가까이 된다. 또한 30세 미만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7%로 큰 편이다. 한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근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연령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여전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8%로 가장 많다. 연령이 50세~59세인 사람들을 여기에 더하면 전체의 절반 정도 된다. 앞에서 근로빈곤층의 성별 구성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라는 일반적인 인식 또한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하는 경우와 관련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7>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

(단위 : %)

	전체 (N=11,462)	빈곤층 (N=1,651)	근로빈곤층I (N=1,154)	근로빈곤층II (N=601)	근로빈곤층III (N=537)
~29세	27.15	17.48	24.58	15.41	13.82
~39세	20.72	12.83	16.83	20.44	18.79
~49세	21.22	14.96	19.12	27.14	27.37
~59세	13.84	9.67	11.73	12.72	13.31
60세~	17.06	45.06	27.73	24.30	26.71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층 II는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층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하지만, 근로빈곤층을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면 근로빈곤층의 연령별 구성은 상이한 특성을 보인다. 이 연구의 개념 정의 방식을 따를 때, 즉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살펴보면 연령이 40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로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4%로 줄어든다. 또한 연령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은 약 15% 정도로 대폭 감소하는 반면, 연령이 30대인 사람들의 비중이 약 20%로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근로빈곤층의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제한하여 살펴볼 경우에도 여전히 연령이 40대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7%로 가장 많으며,

60세 이상인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30대인 사람들이 약 19%, 50대인 사람들이 약 13%이며, 연령이 30세 미만인 사람들의 비중은 약 14% 정도로 감소한다.

이처럼 근로빈곤층의 인구학적 특성이 근로빈곤층에 대한 개념정의의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은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준다. 왜냐하면,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여성이나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이라고 판단할 경우와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남성이며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장년층의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 8> 근로빈곤층의 학력별 구성

(단위 : %)

	전체 (N=11,462)	빈곤층 (N=1,651)	근로빈곤층I (N=1,154)	근로빈곤층II (N=601)	근로빈곤층III (N=537)
초졸 이하	17.36	41.29	28.73	31.06	33.50
중졸	13.05	13.87	15.13	14.45	15.24
고졸	36.50	28.59	36.32	34.76	33.53
대졸 이상	33.09	16.24	19.83	19.73	17.73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 3) 근로빈곤층 II는 6개월 간 경황 빈곤층을 말함.
 - 4) 근로빈곤층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다음으로는 근로빈곤층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자. <표 8>을 통해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학력별 구성을 먼저 살펴보면 전체의 2/3 가량이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 17%, 중졸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은 약 13%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빈곤한 사람들의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이들의 인적자본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전체 빈곤층의 절반 가까이 되는 약 41%의 사람들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약 16%에 불과하다. 빈곤한 사람들 중에서 다시 근로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을 골라서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고졸 이상의 학력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지만,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전체 개인들의 학력별 구성과 비교할 때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상당히 큰 반면에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작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근로빈곤층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거나 6개월 이전까지는 경제활동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정의하고 학력별 구성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는 반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은 더 줄어든다. 취업빈곤층으로 근로빈곤층을 정의할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화된다. 이는 인적 자원의 취약성이 근로계층을 빈곤으로 빠지게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짐작하게 하는 것으로 근로빈곤층을 다른 방식으로 개념정의하는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3)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앞의 분석을 통해 근로빈곤층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의 비중이 약간 많고, 활발하게 경제 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어 이들의 인적 자본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은 일반적인 생각과 일치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근로빈곤층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가? <표 9>는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전체 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이 약 65%로 상당히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이들의 절반 정도는 비경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근로빈곤층의 절반 이상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개념 정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6개월 간 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비경활자의 비중은 약 2.8%로 대단히 적은 반면, 상용직의 비중이 약 31.6%, 자영자의 비중이 약 28.6%, 일용직과 임시직의 비중이 각각 9.2%, 11.5%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준다.

<표 9>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

(단위 : %)

	전체 (N=11,462)	빈곤층 (N=1,651)	근로빈곤층I (N=1,154)	근로빈곤층II (N=601)	근로빈곤층III (N=537)
상용직	28.70(51.56)	11.46	16.39	31.57	35.58
임시직	3.85(6.91)	3.35	4.78	9.22	10.39
일용직	3.76(6.76)	4.16	5.95	11.46	12.91
자영자	13.45(24.17)	10.39	14.78	28.62	32.25
가족종사자	3.64(6.53)	2.85	4.00	7.86	8.86
실업자	2.26(4.07)	3.08	4.27	8.48	--
비경활	44.34(--)	64.71	49.83	2.79	--

1) 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말함.

2) 근로빈곤층I은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을 말함.

3) 근로빈곤층II는 6개월 간 경활 빈곤층을 말함.

4) 근로빈곤층III은 취업 빈곤층을 말함.

5)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6) 괄호 안은 비경활을 제외한 경우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널리 알려져 있듯이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으며, 근로의욕 저하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쟁점들에 대한 대응방식 또한 두 가지 방향에서 각기 달리 마련된다³⁾(Blank, 1994: 168-169). 우선 소득중점 목표(income goal)를 강조하는 방향의 빈곤정책은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중시한다. 즉,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취업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를 위해서는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유지·개발이 필요하며, 상당한 규모의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중점 목표(work goal)를 강조하는 방향의 빈곤정책은 근로빈곤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자체에 초점을 두며, 적은 소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근로를 통해 획득한 소득이 공공부조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급여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한다. 근로는 빈곤계층의 자활의지 진작, 복지의존성의 감소, 사회와의 연계 및 통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성원으로 복귀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 아래에서는 공공부조제도의 생계급여에 오랫동안 의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능력과의 의지의 약화, 그에 따른 빈곤 덩(poverty trap)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더 중시한다.

<표 10>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구성

(단위 : %)

	경제활동종사자			취업자		
	전체 (n=6,470)	비빈곤층 (n=5,869)	근로빈곤층 (n=601)	전체 (n=6,138)	비빈곤층 (n=5,601)	근로빈곤층 (n=537)
전문관리직	10.13	10.65	4.82	10.68	11.16	5.46
기술준전문직	12.40	13.02	6.09	13.08	13.65	6.83
사무직	11.70	12.30	5.65	12.33	12.89	6.37
판매서비스직	21.36	21.20	22.96	22.50	22.21	25.88
농어업	6.14	5.07	17.00	6.46	5.31	19.16
기능직	24.12	24.92	15.93	25.40	26.01	17.96
단순노무직	8.48	7.76	15.76	8.93	8.13	17.76
분류불가능	0.60	0.61	0.52	0.64	0.63	0.59
무직	5.07	4.47	11.27	--	--	--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을 의미함.
 -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3) 근로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Ⅱ와 근로빈곤층Ⅲ을 말함.
 -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어떤 방향의 빈곤정책이 추진되는가의 문제는 정책 목표와 이념적 배경 뿐 아니라 그 사회에 존재하는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즉 빈곤정책이 초점으로 하는 근로빈곤층의 다수가 어떠한

3) 일반적으로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보상과 징벌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그 조합은 달라진다.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빈곤정책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개념정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상당히 달라진다는 분석결과는 근로빈곤층을 초점을 하는 빈곤정책을 모색함에 있어 개념정의와 실태파악과 같은 기초적인 사실에 대한 파악이 다른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이제는 6개월 간 경제활동에 종사한 경활인구와 현재 취업자를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고용 특성에 대해 살펴보자. 경활인구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정의한 근로빈곤층 II에 해당한다. 또한 실업자를 제외한 현재 취업자 중에서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있는 사람들은 앞서 정의한 근로빈곤층 III에 해당한다. <표 10>은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본 결과이다. 이를 보면 근로빈곤층이 주로 종사하는 직종이 비빈곤층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빈곤층의 직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기능직의 비중이 약 24.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판매서비스직으로 약 21.2%, 기술전문직 13.0%의 순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판매서비스직의 비중이 약 23%로 가장 많으며, 농어업직이 17%로 그 다음으로 많다. 하지만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의 비중은 매우 작다. 또한, 전체 경활인구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많이 관찰되는 직종은 농어업직, 단순노무직, 판매서비스직으로 농어업직은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그것보다 3배 가까이 많으며, 단순노무직 또한 2배 가까이 더 많이 근로빈곤층에서 발견된다. 판매서비스직 역시 약간 더 많이 발견된다. 근로빈곤층을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에도, 판매서비스직과 농어업직의 비중이 각각 25.9%, 19.2%로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능직인 경우도 약 18%이며, 단순노무직인 경우는 약 17.8%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관리직이나 사무직의 비중은 상당히 낮다. 여기에서도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월등히 많이 관찰되는 직종은 농어업직과 단순노무직이었다.

한편 <표 11>은 근로빈곤층이 주로 어떤 업종에 종사하는가를 살펴본 결과이다. 근로빈곤층의 경우 기타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약 20.5%로 가장 많다. 하지만 이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다. 조사에 응답하였던 15세 이상 경제활동 종사자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6.2%로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종사자의 비중 5.4% 다음으로 적다. 비빈곤층의 경우는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5.1%로 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근로빈곤층의 경우 농림수산업 종사자의 비중은 약 17.4%로 기타서비스업종을 제외한다면 다른 어떤 업종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소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약 14.8%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광업 및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도 약 12.3%로 상당히 많다. 한편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직종별 구성의 분포보다 많이 관찰되는 업종을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에서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의 비중은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3배 가까이 많다. 또한 음식숙박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의 비중도 전체 경제활동 종사자의 그것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많다. 근로빈곤층의 이러한 업종별 구성은 근로빈곤층을 현재 취업중인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살펴볼 때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11> 근로빈곤층의 업종별 구성

(단위 : %)

	경제활동종사자			취업자		
	전체 (n=6,470)	비빈곤층 (n=5,869)	근로빈곤층 (n=601)	전체 (n=6,138)	비빈곤층 (n=5,601)	근로빈곤층 (n=537)
농림수산업	6.21	5.11	17.44	6.54	5.35	19.66
광업및제조업	19.67	20.40	12.26	20.72	21.35	13.81
전기가스및운수통신	6.46	6.75	3.58	6.81	7.06	4.03
건설업	8.08	8.20	6.89	8.51	8.58	7.77
도소매	15.39	15.45	14.77	16.21	16.17	16.65
음식숙박	6.99	6.73	9.63	7.37	7.05	10.85
금융보험및부동산	5.43	5.74	2.32	5.72	6.01	2.61
기타서비스	25.79	26.31	20.53	27.17	27.54	23.13
분류불가능	0.89	0.85	1.32	0.94	0.89	1.49
무직	5.07	4.47	11.27	--	--	--

- 1) 경제활동종사자는 현재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적어도 6개월 전 이내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던 사람을 의미함.
 - 2) 취업자는 15세 이상 가구원 중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함.
 - 3) 근로빈곤층은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근로빈곤층II와 근로빈곤층III을 말함.
 - 4)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6차 자료.

앞서 언급했듯이 근로빈곤층이 가진 중요한 특성은 이들이 대단히 유동적인 노동시장 지위를 가진다는 점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을 드나들고, 취업과 미취업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한다. 따라서 이들의 고용상태가 어떻게 변화해 왔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2>는 외환위기 직후인 1차년도와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뒤인 6차년도 조사시점 모두에서 빈곤한 것으로 판별된 사람과 모두 빈곤하지 않은 것으로 판별된 사람의 경제활동상태가 두 조사 시점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로 살펴본 것이다.⁴⁾ 두 시점 모두에서 빈곤한 것으로 판별된 사람들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는 외환위기 직후인 1차년도 조사시점의 경우 자영자가 37.5%로 가장 많으며 무직자가 24.5%, 무급종사자가 13.6%, 상용직이 13%였다. 한편 비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상용직이 약 45.6%로 가장 많으며, 자영자가 22.6%, 무직자가 18.3%, 무급종사자가 5.7%의 순임을 알 수 있다.

4)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앞의 <표 9>의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과 <표 12>의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이는 앞의 <표 9>에서의 근로빈곤층은 6차년도의 가구총소득만을 빈곤지위의 판별기준으로 사용한 반면, <표 12>에서의 근로빈곤층은 1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자료 모두에서 빈곤한 것으로 판별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표를 비교해 보면 한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상용직의 비중이 높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자영자와 일용직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2> 빈곤지위별 경제활동상태의 변화

(단위 : %)

1차년도 \ 6차년도		상용	임시	일용	자영	무급종사	무직	합계
		빈곤층(n=99)						
상용		8.66	0.66	2.55	1.10	0.00	0.00	12.98
임시		0.00	0.50	0.00	1.61	0.00	0.00	2.10
일용		1.92	1.31	4.58	0.00	0.00	1.53	9.33
자영		2.54	0.00	0.97	34.03	0.00	0.00	37.54
무급종사		0.00	1.17	1.75	1.60	7.85	1.18	13.55
무직		2.64	4.13	12.13	5.61	0.00	0.00	24.50
소계		15.76	7.76	21.98	43.95	7.85	2.70	100.00
비빈곤층(n=3,235)								
상용		38.90	1.00	0.81	4.26	0.49	0.17	45.64
임시		1.16	1.05	0.50	0.48	0.05	0.00	3.23
일용		1.35	0.28	2.36	0.45	0.09	0.03	4.55
자영		2.35	0.38	0.52	18.64	0.66	0.07	22.61
무급종사		0.46	0.14	0.14	0.56	4.36	0.00	5.66
무직		10.52	1.64	1.46	3.13	1.12	0.45	18.31
합계		54.74	4.50	5.78	27.52	6.75	0.72	100.00

1) 빈곤층은 1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자료 모두에서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 이하에 있는 가구의 경찰가구원(근로빈곤층Ⅱ)을 말함.

2) 비빈곤층은 1차년도와 6차년도 조사자료 모두에서 가구총소득이 상대적 빈곤선을 초과하는 가구의 경찰가구원을 말함.

3) 개인가중치로 가중한 결과임.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 6차, 직업력 자료.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이들의 경제활동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살펴보면, 무직자나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대신에 임시직의 비중은 3배 이상, 일용직의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비빈곤층의 경우에도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임시직이나 일용직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그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지만, 그 증가의 폭은 빈곤층보다 훨씬 적다. 또한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무직자였던 근로빈곤층의 경우, 5년이 경과한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는 이들의 50% 정도가 일용직으로, 23% 정도는 자영자로, 17% 정도는 임시직으로 이동한 반면 상용직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약 10%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에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무직자였던 비빈곤층의 경우는 5년이 경과한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 절반 이상인 57%가 상용직으로 이동했고, 임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한 사람들은 각각 9%와 8%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고용상태는 외환위기 직후에도 상당히 열악했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러한 상태는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한편,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 무직자였던 근로빈곤층 중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도 여전히 무직자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서 근로빈곤층의 노동시장 유동성이 상당히 크다는 점도 잘 드러난다.

4. 결 론

근로빈곤층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라 이들의 빈곤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도 불구하고 근로빈곤층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의 방법을 검토하고,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맞는 개념정의의 방법을 제안하고, 그러한 개념정의에 따를 때 근로빈곤층의 실태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 했다. 이러한 기본적 사실들에 대한 확인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의 방향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로빈곤층은 연구자의 편의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의미로 해석·적용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주로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 혹은 '현재 취업하고 있는 빈곤층'으로 정의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모두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빈곤가구의 가구원 중 조사시점에서 지난 6개월 이내에 노동시장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근로빈곤층을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비록 근로능력이 있지만 아동 양육 등의 활동 때문에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시킬 수 있고, 정규직 임금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등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불안정한 노동시장 지위로 인해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넘나드는 사람들을 포함할 수 있다.

한편, 근로빈곤층을 어떤 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는 물론, 그 특성 또한 달라질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로빈곤층을 개념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규모와 특성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른 분석 결과를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개념정의에 따른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우선, 근로빈곤층 규모의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상대빈곤을 기준으로 가구 단위로 측정할 때를 제외한다면 뚜렷한 감소현상을 보여준다. 달리 말한다면, 한국의 근로빈곤층이 늘어나고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도 선행연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근로빈곤층은 선행연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비슷하고,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60% 정도를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어 인적 자본이 취약하다는 점은 선행 연구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경제활동상태별로 보면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약 32%로 가장 많으며, 자영업자의 비중은 약 29%로 상용직 임금노동자의 비중보다는 약간 적지만, 근로빈곤층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시직과 일용직의 비중도 각각 9.2%, 11.5%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점에서 파악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에서는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44%이며 일용직의 비중이 약 22%, 상용직의 비중이 약 16%인 것으로 나타난다. 직종별로 보면 근로빈곤층은 판매서비스직, 농어업직, 기능직, 단순노무직의 순으로 직업을 가

지고 있었고 산업별로는 기타서비스업, 농림수산업, 도소매, 광업 및 제조업의 순으로 나타나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외환위기 직후인 1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비빈곤층보다 훨씬 열악한 고용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5년이 경과한 뒤인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이들의 고용상태는 더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차년도 조사시점에서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분포를 보면 무직자나 무급종사자의 비중은 대폭 감소한 대신에 임시직의 비중은 3배 이상, 일용직의 비중은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근로빈곤층을 어떤 방식으로 개념 정의하느냐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이 상당히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우선 근로빈곤층을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으로 정의할 경우 이들의 절반 정도는 비경활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업자인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근로빈곤층의 절반 이상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연구의 개념 정의 방식에 따라 근로빈곤층을 6개월 간 경활빈곤층으로 정의하고 경제활동상태별 구성을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의 90% 정도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이 연구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현재 한국에서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으로 주로 논의되고 있는 방안들이 과연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빈곤층을 초점으로 하는 빈곤정책은 두 가지의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고, 두 방향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근로빈곤층의 특성과 관련하여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빈곤정책, 즉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 방안과 같은 것은 근로빈곤층의 특성에 대한 세밀한 고려 없이 구체화되고 있다. 주로 근로중점 목표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있는 이러한 빈곤정책들은 근로빈곤층이 선행연구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남성과 여성의 비중이 비슷하다는 점, 활발하게 경제활동에 종사할 것으로 기대되는 30세~60세까지의 사람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 근로빈곤층의 절대 다수는 어떠한 형태로든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상용직의 빈곤율 상승과 비중의 확대경향과 같이 고용의 질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나타난 근로빈곤층의 특성을 염두에 둔다면, 현재 한국에서 필요한 빈곤정책은 근로중점 목표나 근로연계복지를 강조하는 방향보다는 노동시장의 관련 인프라 보완, 고용의 질 하락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최저임금제의 정비, 적절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팬찮은 일자리(decent job)의 마련 등 소득중점 목표를 강조하는 쪽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근로빈곤층의 직종별, 산업별 구성에서 농어업, 혹은 농림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실 근로빈곤층의 문제는 흔히 임금 근로자의 문제로 여겨져 온 경향이 있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농어민의 빈곤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없이는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완화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어민의 근로여건이 임금 근로자의 그것과 상당히 다를 뿐 아니라, 이들의 빈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 또한 임금 근로자에 대한 그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노대명·이태진·강병구·강석훈·홍경준·이인재·송민아·김선미, 2003.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인회, 2001.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 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복지학』 48: 82-112.
- 금재호, 2003. “일과 빈곤.” 『제 4회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논문집 II』 한국노동연구원·한국노동경제 학회·한국인구학회·한국사회학회·한국조사연구학회.
- 금재호·김승택, 2001. “빈곤의 규모와 이행과정.”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연세경제연구』 8(2): 511-539.
- 박찬용·김진옥·김태환, 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경준, 2000. 『IMF 이후 분배구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병희·정재호,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구조 분석: 반복빈곤 및 고용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회과학연구소·한국산업노동학회 주최 학술대회 발표문.
- 이태진·이상은·홍경준·김선희, 2004. 『근로빈곤층의 실태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덕순, 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대한 동태분석.”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31-59.
- 홍경준, 2004. “빈곤에 대한 동태적 분석: 빈곤주기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24: 187-209.
- Blank, R. 1994. "The Employment Strategy: Public Policies to Increase Work and Earnings". pp. 168-204. in *Confronting Poverty: Prescriptions for Change*, edited by S. Danziger, G. Sandefur, and D. Weinberg.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itro, C., and R. Michael. 1995. *Measuring Poverty: A New Approa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Gorham, L., and B. Harrison. 1990. *Working Below the Poverty line*. Washington DC: Aspen Institute.
- Klein, B., and P. Roncs. 1989. "A Profile of the Working Poor." *Monthly Labor Review* 112(10): 3-11.
- Levitan, S., and I. Shapiro. 1987. *Working but Poor: America's Contradiction*.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Ruggles, P. 1990. *Drawing the Line: Alternative Poverty measur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Washington DC: Urban Institute.

An Exploratory Study on the Working Poor: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and Their Characteristics

Hong, Kyung-Zoon
(Sung Kyun 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nd describe of the reality of working poor in Korea. In spite of the increasing attention to the working poor, usual definitions of the working poor have some measurement questions.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should focus on the key dimensions of work and poverty. This study defines working poor as all "persons who have devoted prior 6 months to working or looking for work and who lived in families with incomes below the poverty threshold". This study also defines poverty threshold based on the both concept of absolute and relative poverty.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the working poor are almost equally divided between men and women and the majority of them are of prime working age. These characteristics of working poor are seems to be quite different from common sense. Also, serious deficiencies of human capital contribute to the employment problems of the working poor. Their education levels are much less than those of the working non-poor. The distributions of the employment status, occupation, and industry show also that the working poor are highly concentrated in a few low-wage jobs.

Key words: working poor, the definition of the working poor, anti-poverty policies for working poor

[접수일 2005. 2. 15. 게재확정일 2005. 4. 20.]